

전망과 과제



김일웅 서울시당 위원장

2014. 10. 23
THUR 19:30

영등포 노동당당사 회의실 (한흥빌딩2F)



최승현 서울시당 부위원장

김현우 前 녹색위원장

김종철 동작당협 위원장

나경채 관악당협 위원장

2014 하반기 중점사업 | 노동당서울시당 월례토론회 | #2. 10월: 당내 현안에 대한 입장토론



《참고자료1》 [중앙당] 제5기 84차 대표자회의 결과

[회의개요]

1. 일시 : 2014. 09. 22 (월) 15:00
2. 장소 : 중앙당
3. 참석 : 이용길, 이봉화, 장석준, 정진우

[논의결과]

안건1] 진보혁신회의 참여의 건

- 본 조직 전환 유보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주문사항] 진보혁신회의 참여 여부를 결정해 주십시오.

I. 배경

- 기간 진행해오던 진보혁신회의(준)을 마무리하고, '신당 창당을 포함한 진보정치 재편 논의기구'로서 진보혁신회의의 본 조직을 출범하는 것으로 결정
- 이에 따라 각 단위에서 참여여부에 대해 확인한 후, 대표자회의를 통해 진보혁신회의(준)을 마무리하기로 함.

〈진보혁신회의 준비모임 10차 집행책임자회의 회의 결과〉

- 일시 : 2014년 9월 17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정의당
- 참석 : 노동당, 노동·정치·연대, 민주노총, 정의당, 진보교연

〈보고〉

- 노동당 : 8월 30일 전국위. 선거평가와 하반기 사업계획 논의. 11월 정책 당대회 예정.
- 노동·정치·연대 : 8월 30일 전국위. 진보정치 재편과 대중운동 사업계획 논의. 9월 27일 재차 전국위 예정.
- 민주노총 : 9월 16일 정치위. 진보정치 관련 5회 연속토론회 예정(10월 2차 토론회는 4개정당, 2개 정치조직), 정치방침 수립을 위한 초안 마련 중(2016 정기대회 수립 목표), 정치위 브라질, 아르헨티나 연수.
- 정의당 : 9월 13일 전국위. 선거평가와 향후 계획. 진보재편 관련해서도 몇 가지 입장 채택
- 진보교연 : 공식 회의는 없었으나 오늘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몇몇 집행부와 사전 교류

〈논의〉

- 진보정치 재편 관련 제안에 대한 각 단위 입장 확인
- 노동당 : 대표단 회의를 통해 진보정치 재편과 관련한 2013년 전국위 결정사항이 유효함을 확인함. 따라서 진보재편을 논의하는 단위에 참가해 당이 결정한 4대원칙 등을 의제로 논의한다는 애초 진보혁신회의 참여 결정을 확인한 것임. 다만, 지금 결성하려는 진보혁신회의의 본조직이 애초에 결성하려던 본조직과 성격차이가 있다면 이는 추가 확인이 필요함.
- 노동·정치·연대 : 제안 단위

- 민주노총 : 진보혁신회의 본조직으로의 조직적 참가는 불가함. 참가를 결정하기 위한 의결단위 논의가 지금 현 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임. 다만 본조직이 결성된다면 과거 중립 결정에 근거해 참관은 희망함.
 - 정의당 : 전국위에서 재편 관련 입장을 채택했고(재편에 공감하는 모든 진보정치 세력과 더 큰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나서며 진보혁신회의(준)의 노력을 존중, 혁신에 공감하고 상호를 신뢰하며 재편에 분명한 의지를 갖는 세력과 함께함) 이에 근거하여 진보혁신회의 본조직 결성에 참여할 수 있음.
 - 진보교연 : 진보혁신회의 본조직 참여에 무리가 없음.
- 진보혁신회의 본조직의 성격 정리
 - 신당창당을 포함한 진보정치 재편 논의 기구로서의 진보혁신회의와
 - 신당창당기구로서의 진보혁신회의 중
 - 전자, 신당창당을 포함한 진보정치 재편 논의 기구로서의 진보혁신회의 임을 정리함
- 결론
 - 각 단위가 애초의 제안서와 정리된 진보혁신회의의 성격, 민주노총은 참가가 어렵다는 조건 변화를 감안하여 입장을 재확인 함
 - 재확인 후 차주 24일 18시 혹은 26일 18시에 대표자회의를 갖도록 함(일정 취합 노동·정치·연대)
 - 대표자회의는 '진보혁신회의 준비모임'을 마무리짓는 대표자회의이며, 진보혁신회의 본조직 결성 여부를 결정함

《참고자료2》 진보혁신회의 준비모임 12차 집행책임자회의 결과

[회의개요]

1. 일시 : 2014. 10. 2 (목) 11:00
2. 장소 : 정의당
3. 참석 : 노동당, 노동·정치·연대, 정의당, 진보교연, (민주노총은 담당자 해외연수 중)

* 신당 창당을 포함한 진보 재편 논의 기구인 진보혁신회의 본조직 결성 제안과 관련, 각 단위별 입장을 최종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 진보혁신회의(준)은 신당 창당을 포함한 진보재편 논의를 위해 본조직 출범을 추진하였으나, 현재 시점에서 참여 단체들의 여건차이로 조건이 무르익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2. 그러나 추후 참여단체들이 조직적 논의를 통해 책임 있는 의지를 표명할 경우, 변화된 조건에 맞게 진보정치의 재편 논의를 지속한다.

* 이와 더불어 논의 과정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회의록에 남긴다.

- 추후 다시 재개하는 기구는 신당 창당을 포함한 진보재편 논의추진기구로 현재의 진보혁신회의 준비모임보다 높은 위상일 것
- 참여했던 단위들이 진보재편의 노력으로 토론회 등의 사업을 제안할 시 기간의 성과를 이어 모든 단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패널 발제문》

● 패널1 / 김종철, 동작당협 위원장

1. 진보신당 창당부터 시작해 만 6년을 넘어선 노동당 운동에 대한 평가를 해주십시오.

노동당 운동은 그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패의 진행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노동당 운동은 현재의 노동당을 구성하고 있는 구 진보신당 및 구 사회당 운동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 속에서 진행돼 왔습니다. 노동당 운동은 조직노동운동과의 결합은 물론, 미조직 노동자, 농민, 노점상-철거민 등 빈민, 장애인 등 각계각층의 운동과 지속적으로 연대해 왔으며, 지역사회 거점 공간 등을 통하여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데 노력하였고, 촛불정국 및 세월호 투쟁 주요한 정세에서 선도적인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2008년 촛불투쟁 정국에서는 다양한 기획과 실천으로 당의 위상을 제고하였고, 신입당원이 대거 늘어나는 등 중요한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비정규직 투쟁과 철거반대 투쟁 등에서 헌신성을 보여 주었으며, 최근 들어서는 당원들이 주축이 된 00당 활동 등이 대중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역차원에서는 거점공간을 근거지로 하여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민중의 집', '지역도서관', '공동체카페', '공동체미디어' 등 다양한 거점공간은 당원뿐만 아니라 주민들과의 소통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이를 만들어내는데 노동당원들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동당 운동은 2014년 말 현재, 진보정당운동의 가장 중요한 본령이기도 한 대안정치세력으로서의 지위획득과 수권세력으로서의 발돋움에 실패하였고, 더불어 현재에도 그 정치적 위상과 내부 조직력이 지속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등 위기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노동당 운동은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패의 진행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노동당 운동이 실패로 접어든 가장 큰 계기는 2011년, 당의 진로를 둘러싼 논쟁이 지도부의 탈당과 활동당원들의 대거 이탈로 귀결되면서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연이은 2012총선에서 당의 등록은 취소되었고, 올해 지방선거에서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곧바로 있었던 보궐선거에서도 참담한 성과에 그치는 등 연이은 선거실패로 인해 당의 위상과 당원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당원 수 감소와 당비 납부율 하락으로 드러났는데 그 수치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2010년 초 72%였던 당비 납부율은 2013년 초에는 52%로 하락했고, 당권자

수는 2013년 1월 6959명에서 2014년 10월 현재 5617명으로 약 19%가 감소했습니다. 불과 2년이 안 되는 시기에 당원자의 1/5이 사라진 것입니다. 더불어 주요 광역시도당이 사고당부가 되었고, 그나마 없었던 상근활동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당의 일상적인 활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당의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로 치달고 있는 것입니다. 하기에 뭔가 획기적인 전환 없이는 노동당 운동은 실패의 진행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표1> 노동당 당비납부를 추이

| | 당원수 | 당비납부율 |
|-----------|--------|--------|
| 2010년 01월 | 16,872 | 72.18% |
| 2010년 02월 | 16,852 | 72.08% |
| 2013년 01월 | 14,538 | 54.49% |
| 2013년 02월 | 14,420 | 52.86% |

<표2> 노동당 당원자수 변화

| 시도당 | 2013년 1월 | 2014년 10월 | 증감 | 증감율(%) |
|-----|----------|-----------|--------|--------|
| 서울 | 2,200 | 1,774 | -426 | -19.36 |
| 경기 | 1,038 | 862 | -176 | -16.96 |
| 인천 | 584 | 466 | -118 | -20.21 |
| 강원 | 196 | 157 | -39 | -19.90 |
| 대전 | 231 | 182 | -49 | -21.21 |
| 충남 | 242 | 203 | -39 | -16.12 |
| 충북 | 195 | 122 | -73 | -37.44 |
| 대구 | 164 | 127 | -37 | -22.56 |
| 경북 | 132 | 101 | -31 | -23.48 |
| 부산 | 460 | 356 | -104 | -22.61 |
| 울산 | 232 | 196 | -36 | -15.52 |
| 경남 | 553 | 444 | -109 | -19.71 |
| 전북 | 245 | 201 | -44 | -17.96 |
| 광주 | 195 | 186 | -9 | -4.62 |
| 전남 | 77 | 76 | -1 | -1.30 |
| 제주 | 151 | 119 | -32 | -21.19 |
| 해외 | 64 | 45 | -19 | -29.69 |
| 계 | 6,959 | 5,617 | -1,342 | -19.28 |

2. 한국 정치는 '강한 여당, 약한 제1야당, 의미 없는 진보정당'의 패턴을 보이고 있고 당분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러한 정세적 상황에서 노동당과 진보정치의 전략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정치학에서 널리 통용되는 이론 중에 "뒤베르제의 법칙"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정치학자 뒤베르제의 이론으로서, 소선거구제 특히 결선투표제 없는 단순다수대표제에서는 정당 간 경쟁의 제한과 유권자의 사표심리 발생 등으로 양당제가 고착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확인된 이런 경향을 인정한다면, 한국사회의 진보정당은 기본적으로 보수양당 체계에서 먼저 보수야당(제1야당)을 대체할 세력으로 성장하여 진보야당(제1야당)의 지위를 차지하고 보수여당과 경쟁하여 집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진보정당이 집권한 경로이기도 합니다. 물론, 비례대표제가 중심인 국가들과 우리나라처럼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가 중심인 국가가 성장경로가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노선을 밟아서 집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현재 노동당을 포함한 진보정치 세력이 보수야당(제1야당)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뒤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시절, 그러한 노선이 실행 가능할 전망을 갖기도 했으나 지금은 각 당이 각개약진하며 그러한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지를 획득해야 할 국민들이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보수양당에 대한 대안으로 진보정치세력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해 초까지도 잘 나타난 것처럼 안철수 현상으로 수렴된 것입니다. 그러나 독자적 정책이나 비전 없는 안철수 현상은 결국 보수야당과의 차별성 유지에 실패함으로써 보수야당에 흡수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낮은 지지와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의 분열은 한편으로는 진보정치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지만, 문제는 진보정치세력이 아직도 대안으로 대중에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기에 우리 노동당 운동은 노동당 자체의 전망과 아울러 진보정치세력이 제3세력으로 도약하는 것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진보정치 분할구도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보정치 분할구도를 극복하고 진보정치재편을 논의하려면 이들 진보정당들과의 재편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중 진보당은 북한에 대한 입장 차이와 최근 이석기 의원 사건에서 보듯이 현실정세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이러한 이유가 바탕이 되어 오랫동안 누적된 당원들의 거부감 등으로 볼 때 당장 진보정치 재편의 상대가 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녹색당은 창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이자 동시에 공식, 비공식적으로 진보정치 재편과는 다른 입장을 표하고 있어 무리하게 동참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당으로서의 정의당과의 재편이 유일한 방안입니다. 물론, 정의당과 진보정치 재편을 추구하더라도 노동 운동 내 지지그룹, 진보적 학계, 시민사회 진영 등 다양한 세력과 함께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그 강령에서 7대 과제로 '경제 민주주의, 노동의 가치 실현, 복지체제 확대, 차별 없는 평등사회, 농업희생과 탈핵, 한반도 평화통일, 근본적 정치개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재벌해체와 협동조합, 노동자 자주관리 확대, 비정규직 사용제한, 파견제 폐지, 기간산업 민영화 반대와 공공성 확대,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와 에너지 전환, 결선투표제 및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 등 우리 노동당과 크게 다르지 않은 노선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정치민주연합 등과 정치협상에 매몰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으나 정의당이 노동당과 진보정치재편에 함께 한다고 결정한다면, 이러한 경향이 내적으로 견제될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향을 완화하고 제어하는 것은 향후 정치논쟁의 영역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정의당 역시 당내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바, 그 조직문화가 근본적으로 다른 새정치민주연합 등과의 통합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정의당은 최근 전국중앙위원회에서 이를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건대, 진보정치재편을 통한 제3당 전략이 우리에게서 매우 절체절명의 과제이며, 여러 요소를 평가해 볼 때도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정치 재편을 우리 당이 일부러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의 현실을 감안하고, 노동운동진영, 진보적 학계, 시민사회 진영이 진보정치재편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이상의 과제를 수행할 조직으로 지금까지 진보혁신회의(준)가 구성되어 지금까지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최근 당 대표단 회의에서는 진보혁신회의 본조직 참여를 유보했는데 조만간 다시 당내 절차를 거쳐 진보혁신회의 본조직 참여를 의결하고, 진보정치재편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진보정치 재편을 하던 노동당을 강화하려고 하던, 진보정치의 혁신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진보정치가 혁신해야 할 부분과 우리가 지향해야 할 당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진보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나름의 노력이 진행돼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내용이 있어서 우리 진보정치가 이런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과한 평가라 할 것입니다. 혁신의 내용이 새롭게 제출돼야 한다기보다는 기존에 도출된 과제를 제대로 실천할 실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대중사업 풍토의 혁신, 정책역량의 육성, 평등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의 확산, 당원과 활동가 교육의 강화, 지역사업을 위한 거점공간의 정착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진보정치재편 과정을 통해 새로 만들어질 정당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폐해와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기존 국가사회주의의 오류를 넘어서고자 하는 진보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고, 생태주의와 풀뿌리 민주주의, 국제연대 등 그동안 소홀히 했던 진보운동의 내용을 흡수하며, 보수양당체제에 흡수되지 않는 독자적인 진보정치의 미래를 노선으로 확립하고, 아래로부터 당원들이 주인 되는 민주적 운영체제와 패권주의를 배제하는 투명한 조직문화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그동안 우리가 전혀 몰랐던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를 갈고 닦는 등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을 충실히 할 때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 패널2 / 김현우, 전 녹색위원회 위원장

1. 진보신당 창당부터 시작해 만 6년을 넘어선 노동당 운동에 대한 평가를 해주십시오.

- 진보신당은 '非주사 독자 진보정당' 노선으로 국한되지 않는 '진보의 재구성'을 창당 정신으로 출범했고 그 의미와 일정한 가능성을 확인했으나, 민주노동당과의 통합과 탈당을 포함하는 몇 차례의 내홍과 혼란을 겪으며 자기 동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 당의 객관적 조건이 매우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나, 특히 지난 해 '노동당'으로 재창당을 거친 이후 역설적으로 당의 독자생존과 진보의 재구성 노선이 모호해지고 단기적 정치공학에 골몰하게 되면서 당의 응집력을 떨어뜨리고 재차 통합과 재편 논의에 시달리게 된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 당의 불투명한 전망과, 지난 과정에서 축적된 당 내 의견그룹들 사이의 알력, 그리고 극도로 저하된 당 조직과 당원의 결합력 수준이 정상적인 사업 기획과 집행 및 평가를 모두 불가능하게 하고 당원들을 이탈하게 하고 있는 바, 이대로라면 차기 주요 선거 대응은 물론 당의 재(再)안정화조차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 이러한 상황의 책임 소재를 따져 묻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지금은 현 시점에서 노동당 재창당의 대차대조표를(미래의 전망까지 포함하여) 작성하고 당의 창당 정신과 한국 사회에 유의미한 진보좌파 정당의 지향과 가능한 목표를 냉정하게 재설정하여 당의 진로에 대한 당 내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 결정적인 문제는 이러한 동의를 확보, 그 이전에 당내 세력 간 신뢰의 약속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노동당 하나로"가 더 이상 실제로 가능하지 않다면, 그 이유와 이후 계획에 대하여 의견 그룹 간에 솔직한 입장을 밝혀야 실속 없는 논의 반복을 피할 수 있다.

* 한줄 요약: 과거 회귀적 정치공학 의존과 미봉적 재창당이 당의 존재 의의를 스스로 삭감하고 무력화했다.

2. 한국 정치는 '강한 여당, 약한 제1야당, 의미 없는 진보정당'의 패턴을 보이고 있고 당분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러한 정세적 상황에서 노동당과 진보정치의 전략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 "강한, 약한, 의미 없는"이라는 것은 오로지 영향력의 크기만을 잣대로 하는, 즉 정치적 내용은 없는 구분이다. 물론 아무리 좋은 노선도 '유효한' 정치를 위해서는 일정한 영향력을 확보해야 하지만, 그 영향력은 현 사회 체제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진지한 대결 자세와 해결 능력을 시간을 두고 인정받을 때만 획득 가능해진다.

- 현재의 상황을 과거의 운동이나 지난 인연관계에 기대어 가까운 세력(정의당, 노정연 등)과의 연합을 통해 타개하려 하는 것은 오히려 물역사적이고 물정세적인 인식이다. 제3당이냐 제4당 또는 제5당이냐 하는 것 보다 우리의 정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그것이 분명할 때 당은 모종의 제3당에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더라도 유의미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 대안 세력의 공백이나 대중운동의 침체 상황을 이유로 노동당 플러스 알파 세력의 기동적/지도적 역할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진보정치의 통합 재편을 주장하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노동당에게 적절치 않은 주문이며 지금은 '의미 없는' 진보정당의 그 '의미'를 스스로 채우고 가시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때다.

- '우선 생존을 위한 재편'과 '우선 재편을 통한 생존'은 우리의 실현 목표와 과제를 언제나 다음 단계로 미뤄두게 만들고 정치공학적 주고받기에 얽매이게 할 수 밖에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사회와 어떤 정치를 바라는 것이냐 하는 분명한 물음과 그에 대한 대답이며, 재편의 파트너와 지향할 당의 모습 역시 그 속에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잠정적 대답이 자본주의 극복과 생태문화사회 전환을 위한 정치라는 것이 동의된다면, 녹색당 등 현실 정치세력 가운데 지향을 같이 하는 조직들과의 대화와 연대가 우선이다.

* 한줄 요약: "그러니 도로 민노당 할래, 도로 사회당 할래"라는 질문은 좋은 정치가 아니다.

3. 진보정치 재편을 하던 노동당을 강화하려고 하던, 진보정치의 혁신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진보정치가 혁신해야 할 부분과 우리가 지향해야 할 당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 '진보정치의 혁신'은 모호한 말이며,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꾸고 그것을 어떻게 촉진하고 주도할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한다. 진보정치 전체든 노동당이든 필요한 혁신은 디테일한 테크닉이나 제도 보다는 오히려 거대 담론적 접근과 과감하고 치열한 현실 해석과 비판 정신의 복원이다.

- 당 내로는 평등, 생태, 평화, 연대의 정치 노선을 다시 환기하고 이를 현실화 할 창의적인 프로그램과 기획을 작성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현실화할 당적 태세를 갖추는 것이 혁신의 주요 내용이어야 한다. 조직구조의 개편과 작풍 및 사업 방식의 전환 등은 이러한 맥락 속에 논의되어야 하지, 그 자체 개별적으로 강구되어서는 의미가 없다.

- 당의 정체성과 자생력을 다시 확보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를 요할 것이며, 선거 정치에서의 성과는 당분간 유보해야 할 수 있다. 향후 수년 동안 최소비용 대비 최대효과를 가진 유연한 당 운영 체계와 방식을 취하면서, 새로운 운동의 경험과 지향을 가진 젊은 집단이 당의 에너지를 모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0대 지도부의 전면화를 통한 당 내 세대교체와 세력 교체를 미룰 이유가 없다. 또 한 번의 '재창당'이 필요하다면 단지 또 한 번의 당대회가 아니라 이러한 폭넓은 과제와 과정의 소화를 의미하며, 그 구체적 형태와 방식 및 시간 범위는 열려 있는 문제다.

* 한줄 요약: 반자본주의 녹색좌파 정치의 주류화와 이를 실천할 세력 교체가 당과 진보정치의 혁신이다.

* 총결론: 지금 필요한 것은 도로 민노당이 아니라 어게인(again) 진보신당 운동이며, 당의 갱신을 통하여 더 많은 녹색좌파와 만나고 스스로를 바꾸려는 과감한 기획과 결단만이 미래를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 패널3 / 나경채, 관악당협 위원장

1. 진보신당 창당부터 시작해 만 6년을 넘어선 노동당 운동에 대한 평가를 해주십시오.

진보신당의 창당은 민주노동당의 정파이기주의, 편향적 친북행위와 관련한 당내외의 논란으로 촉발되어, 이명박 정부의 탄생과 시간적 궤를 함께 했다. 2008년 2월 3일 당대회를 기점으로 분출된 신당창당 흐름은 3월 16일 진보신당의 창당으로 정점을 찍은 후, 4월 9일 총선에서 원내 진입이 좌절되면서 한 국면을 지나게 되었다.

당시 우리를 향한 여론의 기대도 있었지만, 무거운 비판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내야 한다. 민주노동당의 분당이 여타의 대중운동 단체에 미칠 후과에 대한 고민 속에서 제출된 것인지, 그로 인해 유동적일 수밖에 없었던 당의 정세대응능력의 문제가 이명박 정부가 추

진하는 각종 신자유주의 정책의 브레이크 역할이라는 진보정당의 기본까지 유동적인 것으로 만들 우려가 있을 수 있었다는 점, 진보다수당 시대를 열어야 했던 내적 절박함이 외적 준비와 내부적 태세의 완비, 대중적 공감으로 까지 상승하지 못한 속에서 노심조로 표상되는 대중적 명망가 정치에 기대는 측면이 있지는 않았는가 하는 점 등이 기억해내야 할 비판이다.

이런 비판은 총선 직후 전면화 된 광우병 촛불시위와 울산 복구 조승수 의원의 2009년 상반기 재선거 당선으로 인한 기사회생 분위기 속에서 잊혀지기 시작했다. 앞서 요약한 지적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이것들이 올바른 지적이어서 라기 보다는 이런 비판에 대한 반(反)비판 속에서 당의 초기 전략을 수립·점검했어야 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고, 그것이 적지 않은 정도로 지금의 우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2011년의 독자-통합 논쟁은 필연적이었다. 독자론은 대책 없는 고립주의처럼 비판되었고, 통합론은 무조건적인 투항으로 인식되었다. 당시의 논쟁이 불가피했고 필연적이었다 하더라도 최근 제기된 진보정치 재편을 둘러싼 찬반논의가 당시와 같은 수준에서 진행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2011년의 역사를 경과한 후에도 진보신당은 사회당과의 통합을 통한 진보좌파정당 시도, 독자적인 총선대응, 정당등록의 취소와 재등록을 거쳐 대선대응을 둘러싼 심각한 논쟁을 거쳐, 최근의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거쳤고 이 과정에서 선거로 대표되는 하나의 사이클(cycle)을 독자적으로 경유했기 때문이다.

이제 노동당은 노동당 운동이 현재 보유한 대중적 기반과 한계, 노동당의 눈으로 본 진보정치 운동의 전망, 2016년부터 3년 연속으로 찾아오게 될 총선-대선-지선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처럼 창당의 정당함이 모든 실패와 우려를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었던 것을 지양함과 동시에 반복된 실패와 어려움을 강조하는 것으로 다른 길을 주장하는 왜소함을 넘어서는 토론과 혁신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2. 한국 정치는 '강한 여당, 약한 제1야당, 의미 없는 진보정당'의 패턴을 보이고 있고 당분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러한 정세적 상황에서 노동당과 진보정치의 전략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정당정치를 하다보면 늘 다수와 소수 사이에서 고민하게 된다. 우리의 경우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가까운 미래를 예상해도 그렇고 당분간 소수의 처지에서 정치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다수를 빛나게 하는 소수가 있고, 소수가 왜 존중받아야 하는지 온몸으로 역설하는 빛나는 소수가 있다고 본다.

지금의 상황에서 노동당과 진보정치의 처지는 사람들에게 왜 미워도 민주당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시키고 있다. 우리는 진보재편이 성공하더라도 당분간은 소수정당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렇더라도 어떤 소수가 되느냐가 중요하다. 이 중 후자의 소수가 되기 위해 나는 자신의 등지를 파괴하는 장산곶매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 당을 깨자는 것이냐고 왜곡할까봐 굳이 말씀드리면, 우리를 안락하게 하는 것들, 무엇하나 근본적으로 혁신하지 않으면서 좀 더 열심히 하며 때를 기다리면 기회가 올 것처럼 생각하는 그 안일함의 등지를 버리자는 것이다.

현재의 조직력, 지금의 정치력과 정책기획 능력으로는 노동당이 우리 사회를 정치적으로 좌경화시키거나 사회의 보수적 기반에 파열구를 내기 어렵다. 이것은 정의당이나 민주노동당 등 대중조직에게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2중대 노선은 과거에는 의지의 문제였으나, 지금은 조건과 상황이 불러오는 결과의 문제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민주당과 진보진영의 대응은 다른 것이 거의 없다. 세월호대책위에 노동당을 포함한 정당들은 참관단체일 뿐 참여단체가 아니다. 지역에서도 중요한 현안을 다루는 논의에 진보정당들이 배제되거나 발언권을 제약받기 시작한지 오래되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누구 탓이냐 보다는, 어떻게 이런 비정치적 정치 환경 속에서 다시 진보정치를 일으켜 세울 것이냐에 대한 방안을 찾는 것이다. 나는 진보정치의 통일, 재편을 주장하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우리 노동당이 진보정치 재편에 나서자고 하는 주장은 단지 우리 당의 어려움을 넘어서 보자는 수세적 대안만은 아니다. 오히려 전반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진보세력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정치적 계기를 제안하는 것이고, 전통적 사회운동의 역사를 계승하되 새로운 사회운동의 기운을 정치적으로 수렴하여 진보정치운동 전반의 전환점을 만들어 보자는 공세적 기획이다.

첫째, 진보정치 재편론은 특히 정의당과 노동당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것이다. 재편의 과정을 통해 정의당은 사회운동과의 굳건한 정책·이념적 연대를 복원해야 한다. 청소년운동의 가치를 조직적으로 재검토하여 청소년인권과 선거권연령 인하 운동의 필요를 인정하거나, 노동가치의 실현을 위한 정책의 개발만이 아니라 그 주체라 할 수 있는 노동자운동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진보재편 과정에서 더욱 다양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또 이 과정에서 노동당은 다른 진보진영과의 은원을 강조하는 정치적 고립주의와 결별해야 한다.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소수정당일수록 확고한 정체성은 유연한 연대전략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둘째, 진보정치 재편론은 제3정당 운동으로부터 시작하지만 무능한 제1야당을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대중적 필요를 정치적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세월호 대참사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바꿀 의지가 없는 새누리당에 대적했던 제1야당이 국민에게 보여준 것은, 그 어떤 것도 바꿀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보이고 있는 무능한 계파정

치를 진보정치 세력이 극복하고 넘어서지 못한 채 2016년부터 3년 연속으로 이어지는 선거를 거치게 되면 그것이 민중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노동당 뿐 아니라 진보정치 진영 전체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 무능한 제1야당의 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상황과 조건을 스스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손을 잡아야 한다.

셋째, 진보정치 재편론은 그 과정에서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운동,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조직운동, 공동체 미디어 운동, 3포세대로 표상되는 새로운 청년운동, 민중의 집 운동, 탈핵과 에너지 자립운동 등의 흐름과 만나야 한다. 이러한 운동이 제기되는 문제의식과 조건들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동시에 이러한 운동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와 담론 투쟁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진보정치 재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선거와 같은 임박한 정치 일정이 없는 지금과 내년 상반기까지의 기간이 진보정치의 혁신과 재편을 실천하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 노동당 안의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우리와 진보정치의 통일재편으로부터 시작하는 혁신논의의 발동을 걸자!

3. 진보정치 재편을 하던 노동당을 강화하려고 하던, 진보정치의 혁신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진보정치가 혁신해야 할 부분과 우리가 지향해야 할 당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진보정치 재편은 형식적 재편과 함께 진보정치 전반을 새롭게 혁신하는 재편이어야 한다. 이렇게 혁신과 함께 진행되는 재편만이 떨어진 노동자 민중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우리는 진보정치 혁신의 과제이자 진보정치재편 과정을 통해 새로 만들어질 정당의 내용으로 현 전국위원들이 결의한 3기 1차 전국위원회 결의문에서 이미 다음과 같은 혁신제안에 기초하여 진보결집을 이루자고 주장한 바 있다.

첫째, 자본주의의 폐해와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기존 국가사회주의의 오류를 넘어서고자 하는 진보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고, 둘째, 기존 보수양당체제에 흡수되지 않는 독자적인 진보정치의 미래를 개척하며, 셋째, 아래로부터 당원들이 주인 되는 민주적 운영체제와 패권주의를 배제하는 투명한 조직문화를 수립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대중정당, 현실정당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결의문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진보정치 재편론은 그 과정에서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운동,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조직운동, 공동체 미디어 운동, 3포세대로 표상되는 새로운 청년운동, 민중의 집 운동, 탈핵과 에너지 자립운동 등의 흐름과 만나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운동이 제기되는 문제의식과 조건들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동시에 이러한 운동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와 담론 투쟁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 패널4 / 최승현, 서울시당 부위원장

“재구성하며 연결한다” - 우리, ‘녹색좌파 대중정당’으로 거듭나자

(‘당의 전망과 과제’를 묻는 토론회이지만 ‘진보정치 혁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하게 집중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그 속에서 할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맨 뒤에 첨부한 신좌파당원회의 나도원 대표의 “재구성하며 연결한다”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진보신당 창당부터 시작해 만 6년을 넘어선 노동당 운동에 대한 평가를 해주십시오.

1) 우리당은 민주노동당의 패권주의 종북주의를 비판하면서 탈당하고 새롭게 시작할 때 상당히 많은 진보진영의 주목을 받았고, 녹색위원회, 성정치위원회 등 참신한 기획과 사업을 벌여서 대중기반을 상당히 넓혔습니다.

2) 진보정치의 재구성이라는 논쟁은 창당초기는 유의미했을지 모르겠지만 당의 확장의 모습이 아닌 당 자체의 존립과 지속성에 대해 당원들이 흔들리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2011년 논쟁은 결국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의 통합진보당 프로젝트에 합류할 것인지 아닌지의 선택의 문제였던 것이고, 사후적으로 보면 함께하는 결정을 했다면 원칙에도 어긋나고, 실리도 챙기지 못하며, 진보정당운동의 잘못된 폐해 등에 대해서 같이 비판받게 되는 부분이 됐을 것입니다.

4) 전 현직 당 대표, 국회의원이 당의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은 당원들에게 큰 상처로 돌아왔고, 상당부분의 당 조직은 유실됐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명망가 정당’이 아닌 상태가 됐습니다.

5) 진보정치 재구성은 2012년 사회당과 합당을 하고, 새로운노동자정당추진위원회를 규합하면서 소규모 성과를 거뒀지만 총선이후 더 큰 틀의 진보좌파연합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6) 2013년 노동당으로 당명을 개정하면서 ‘임시정당’ 체계를 벗어나자고 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7) 기관지를 안정적으로 발행하고,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가게 된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

합니다.

8) 지방선거를 통해서 후보와 조직이 단단해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는데, 전체적으로 합력을 모으지 못했으며, 당의 방향과 모습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9) 중장기성장전략을 세우고, 2014년 4월 전국위원회에서 통과됐지만 아직 그것을 실행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10) 우리는 헌신하여 활동하는 다양한 당원들이 전국 곳곳에 있지만 당원들의 마음을 얻고, 그 합력을 모으며, 당의 비전을 보여주고, 정치적인 기획을 하며 추진해 나가는 것은 부족했습니다.

11) 하지만 우리는 원칙에서 어긋나는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으며, 밀양, 강정 등의 투쟁, 희망버스, 비정규직 투쟁 등에 가장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정당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12) 현재 권력획득이나 국회입성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 활동을 하는 당원보다 강령에 동의하면서 함께 투쟁하는 당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13) 실패했다고 선언된 민주노동당의 영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원칙적인 입장을 취하고, 권력의 가능성에 좌지우지 되는 정당이 아닌 정당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현 불안정노동-금융수탈 체계를 넘어설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14) 우리는 '명망가 정당'에서 '대중정당'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고, 우리 당원들의 자발적인 활동과 역량을 '정책연구', '교육', 각종 '부문' 등으로 엮을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15) 녹색당이 작지만 그들만의 발전전망을 갖고 조금씩 나아가는 모습에서 우리도 생각해 봐야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16) 우리는 '녹색좌파 대중정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다.

2. 한국 정치는 '강한 여당, 약한 제1야당, 의미 없는 진보정당'의 패턴을 보이고 있고 당분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러한 정세적 상황에서 노동당과 진보정치의 전략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1) 신자유주의 시대, 불안정노동-금융수탈의 시대에 어떠한 정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과 우리의 역사를 강령으로 담았습니다.

2) '의미 없는 진보정당'의 문제 보다 우리(노동당)가 의미가 크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 이것은 시대를 보고, 우리(노동당)의 전략을 세우고, 그 속에서 다른 진영을 인입시키고, 조직하면서 커나갈 계획을 세워야하는데, 그러하지 못한 것과 연동이 됩니다.

4) 과거 민주노동당은 여타 제반 민중운동들의 흐름과 성과, 인력이 모두 모아졌다면 그 이후는 민주노총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에서도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어떤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경쟁을 하고, 하나씩 쌓아 갔어야 하는 것입니다.

5)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제대로 세우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원칙을 저버렸고, 그들은 단 기간(2012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다수를 당선시키는 성과를 냈지만 그 이후 통합진보당 내 논쟁과 정의당의 창당은 진보정치에 대해 환멸을 느끼게 했습니다.

6) 하지만 그 시기 우리가 국민들에게 대안으로 보여지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7) 현재 진보정당이라고 전통적으로 불러오는 통합진보당, 정의당에서의 진보진영발전전략은 그 당을 중심으로 그 당으로 어떻게 다른 세력을 묶을 것인지의 모습입니다.

8) 우리당도 우리당을 중심으로 진보정치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상황이 어렵고, 현재의 국면으로 헤쳐가기 어렵다는 방식으로는 당원으로서의 자존감도 상하게 되고, 함께 무언가를 하기도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9) 원칙을 지키는 것에 있어 통합진보당, 정의당은 함께 진보정치 전략을 세울 파트너로 현재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10) 우리의 원칙을 세우고, 새롭게 인입할 수 있는 정치체계로 '녹색좌파 정치연합'을 제안 드립니다. 여기에는 '녹색당', '반(反)금융운동', '탈핵운동', '비정규불안정노동운동', '기본소득운동', '노동운동 혁신세력' 등이 해당할 수 있을 것이며, 후쿠시마 5주년인 2016년을 목표로 결집을 시작하고, 2015년부터 공동행동을 시작하면서 구성해 보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진보정치 재편을 하던 노동당을 강화하려고 하던, 진보정치의 혁신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진보정치가 혁신해야 할 부분과 우리가 지향해야 할 당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1) 평화정당이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 반핵은 구시대 좌파가 스스로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NL 세력들의 사고에 동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좌파가 이에 대해 고민하고, 논쟁이 됐었고, 우리 당은 어느 정도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진보정당에 대해 평화정당이 아닌 친북정당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거 진보정당의 주류가 애매한 입장 또는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던 역사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러한 정당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여 제대로 된 평화정당인 좌파정당 노동당이 있음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2) 대중정당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명망가 정당'이 아닌 '대중정당'이어야 합니다. 노심조의 폐해가 어떠했는지 함께 당을 하지는 않아 잘 모르지만 당의 방침보다 개인을 우선시하는 모습과 권력지향을 가지며 원칙을 훼손하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여러 경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중, 당원이 중심이 되는 정당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선거에 출마하면서 당의 방침과 어긋나는 선거연합을 하는 행위들이 또 다시 일어나는 상황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국민들이 노회찬, 심상정과 같은 분이 훌륭한 사람임을 인식하지만 이제 보수정치인과 똑같이 권력을 너무 추종하는 모습으로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변절의 역사에서 우리는 원칙을 지키며 대중들이 새로운 주체로 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3) 원칙을 지키는 정당이어야 합니다.

자본주의에 대해서, 노동자 투쟁에 대해서, 반핵, 민영화 등에 대해서 원칙을 지키면서 그러한 대중운동을 조직하는 정당이어야 합니다. 당장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원칙적인 발언도 하지 못하는 상태는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닙니다.

노동자-민중들의 상황, 한국사회를 변화시킬 의제를 제기하고, 그 투쟁과 기획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최승현-첨부》 재구성하며 연결한다 - “녹색좌파 대중정당” (나도원, 신좌파당원회의 대표/노동당 문화예술위원장/노동당 부문위원회 합동운영위원회 의장/예술인소셜유니온 공동위원장)

“초가을 무렵 창 밖에 펼쳐진 풍경, 노랑과 초록이 한 몸으로 어우러진 논이 참 예쁘다. 내가 희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저러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현실을 반영한 정치주체화'를 바탕으로 구세력의 복원이나 진보재편이 아니라 가치 있는 재구성, 즉 '좌파의 재구성'의 역설이다. 원칙을 세웠다면 좌파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당에 대하여 말할 차례이다. 우선 당은 존재이유와 철학을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선언적 강령의 작성보다 강령에 대한 합의와 실천이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현실에서 대안정치의 역할을 찾고, 당의 방향성 순으로 궤도를 구축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과거의 당이 보여준 문제점들을 크게 넷으로 정리하여 반면교사로 삼고자 한다.

과거에서 (오류를) 배운다

첫째, 기치는 허구가 되어버렸다. 옛 진보신당연대회의는 '진보의 재구성'을 기치로 내걸고 등장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실정치력 확보라는 미명 하에 몇몇 정치인의 국회 재입성을 위한 과도프로젝트에 불과했다(현실정치력에 대한 무시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현실정치력'의 형성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모든 기획과 활동이 그 목적을 위하여 짜여졌다.

둘째, 전략의 부재이다. 장기전략의 자리에는 늘 단기전술이 차지하고 앉아 있었다. 진보의 재구성에 대한 전략적 의지가 실재하여 수행하고자 했다면 합리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공격적으로 확대했어야 옳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이러한 태생적 관성은 당의 운영과 사업에 반영되어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바로 무력감에 빠져들었고, 장기전략의 부재로 인한 대형조직과 대중여론 의존성은 불안정성의 지속으로 이어졌다.

셋째, 잘못된 당 운영 풍조로 인하여 당원은 소외되었다. 탄생부터 비롯된 구조적 숙명은 소수 정치인 중심의 구조와 운영방식을 만들어놓았다. 활동가들은 핵심정치인의 조력자 구실을 했고, 소수의 구상과 발언이 당의 결정을 좌우했다. 이런 풍조는 이후에도 남아 아무런 철학적 합의 없이 당권을 위하여 이합집산하거나 당의 리더를 합의추대하고, 유력한 지위에 있던 사람이 당의 결정에 반하여 독단하는 행태로 이어졌다. 당을 지켜온 활동가들 중 일부는 장기간 생존을 위한 암중모색과 당내 갈등을 감내해온 결과, 정치인도 아니고 투사도 아니라 관료화된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겉으로는 소중한 구성원들로 호명되는 당원들은 사실상 팬클럽 회원에 불과했으며, 기존 활동가들과 새로 유입된 당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놓여 있었다. 사실상 중앙과 유리된 지역활동가와 새로운 당원 다수가 자신의 역량을 당에 보탬 창구를 찾기 힘들었다.

넷째, 이로써 항시적 위기상태가 지속되었다. 과거 당의 모순은 냉정한 선거결과를 극복할 수 없었다. 상층의 단기전술과 다수의 장기기대가 상이한 상태가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때마다 재편론이 머리를 들었다. 극단적인 경우가 진보신당을 창당한 일부 인사들이 진보통합을 명분으로 뛰쳐나간 사태였다(그리고 그들은 실패했다). 당력이 유실되는 과정에서 절박한 위기감을 느낀 구성원들 중 일부는 당의 전망 대신 개인의 자기전망을 모색했다. 공동책임자보다는 지지자의 포지션을 취한 일부 당원들은 거국적인, 그러나 비현실적인 정치구상이 왜 실현되지 않는지 불만을 표출했다. 결국 당은 항시적 위기상태에 놓

인 채, 재편론의 반복이라는 악순환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눈여겨볼 지점은 이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당원 다수는 당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다(당원과 당권자 감소 추세를 극단적으로 과장해선 안 된다). 소수 명망가와 활동가의 움직임에 휩쓸리지 않는, 다수의 당원들이 존재하며, 나름의 활동과 재생산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현재의 당이 대중정당의 정체를 지녔거나, 최소한 그 가능성을 확보했음을 보여준다. 상층의 논의에 따라 세력통합을 성급하게 추진하려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 노동·정치·연대와 같은 조직은 이러한 대중정당의 성격을 이해할 수 없다.

한편 당 안에는 어떤 주의주장을 표방하면서도 입장을 바꿔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를테면 녹색사회주의를 주창하며 당 운영의 주도권을 잡았음에도 2013년 재창당 과정, 그리고 이후에 그들 중 일부가 취한 입장에선 노선지향의 일관성과 의지를 확인하기 힘들다. 한편에는 새로우면서도, 생각이 다른 당원들을 위한 배려와 설득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헌신을 통한 책임정치성을 아직은 확인할 수 없는 움직임도 있다. 안타까운 것은 공히 당을 패배와 청산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동안 지속된 '통합 vs 독자'의 구도는 종결되고, 이미 '혁신 vs 분리'의 구도로 전환되었다. 지금 청산해야 할 것은 좌파정치의 근거지인 당이 아니라 바로 청산주의이다.

이러한 한계들에 대한 대안은 분명한 노선과 과정을 위한 협력, 그리고 실행의 기획과 대중정당의 실현이다. 우리의 답은 '녹색좌파 대중정당'이다.

'녹색좌파 대중정당'과 '녹색좌파 정치연합'

이제 우리의 답은 전환세력에 의한 전환정치로 귀결된다. 금융문제와 비정규, 불안정노동문제로 가득한 신자유주의 사회의 전환 말이다. 또한 생태의 문제는 약자에 대한 지배와 수탈, 나와 남의 분리, 자본의 전지구적 지배와 연결되어 있고, "인간의 억압체제와 대지의 억압 간의 관련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의미 있는 정치행동의 전략과 계획을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것은 이 때문이다. 21세기에 생태와 좌파를 함께 이해하지 못하는 사유는 퇴보이다. 노동·생태문제는 자본주의 독점시장과 수탈구조에서 비롯되었기에 공공성을 강조하는 반재벌운동과도 분리될 수 없다. '녹색좌파'는 녹색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체제의 전환을 위한 노선이며 새로운 노동이 결집할 수 있는, 넓은 마당이다.

우리는 '혁신'과 '융합', '실천'과 '세대교체', 그리고 '당원존중'의 다섯 지향을 위한 내부의 혁신을 바탕으로 하여, '청년, 문화, 녹색, 새로운 노동(비정규, 불안정노동), 기본소득'이라는 다섯 기치를 내걸고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녹색좌파 대중정당으로 가는 내용적 재창당의 출발이다.

지나간 바람으로는 풍차를 돌릴 수 없다. 새로운 바람결과 물길들을 모아 외연을 확장하

여 좌파정치의 재구성을 위한 제안이 '녹색좌파 정치연합'이다. 우리는 당과 녹색당은 물론 반금융운동, 탈핵운동, 비정규, 불안정노동운동, 기본소득운동, 그리고 민주노총 혁신세력들까지 아우르는 녹색좌파 정치연합을 제안하고 실현시켜야 한다. 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 5주년인 2016년을 목표로(2016년은 총선의 해이기도 하다) 결집을 시작하여, 4주년을 맞는 2015년부터 공동행동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대중성을 획득하는 좌파정당의 노선은 녹색좌파 대중정당이다. 현재 노동당은 '녹색'좌파로 나아갈 준비를 못했고, 녹색당은 '녹색'좌파로 나아갈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바로 지금이 "녹색좌파 대중정당"을 위한 당 혁신과 내외부의 결합, 노동당과 녹색당 그리고 새로운 운동과 노동혁신세력이 협력하는 "녹색좌파 정치연합"의 구성, 직선제를 통한 "민주노총의 쇄신"을 시작할 때이다. 우리는 이 모든 국면에 적극 개입하고자 한다.

안으로 '녹색좌파 대중정당'으로의 내용적 재창당, 밖으로 의제와 전망이라는 고리로써 맺어지는 '녹색좌파 정치연합'의 추진. 이것이 실현될 때에 이른바 진보정치 제2기, 아니 새로운 좌파정치가 도래한다. 이 과업에 다각도로 동참한다면, 이 소임을 다한다면, 각자 가슴 속에 품어온 말을 드디어 꺼내어 내뿜을 수 있을 것이다.

"여린 모를 적당한 때에 심고 애써 기르면 좋은 알곡들이 맺힌다."

이제부터 서술하는 내용은 '녹색좌파 대중정당'과 '녹색좌파 정치연합'의 준비와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며, 사회주의 계급정당에 질적 수용이 필요한 부분들을 부각한 것이다.

① '당원중심 대중정당'을 위한 쇄신과 실험

또 다른 누군가 말했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를 당으로 구현하라!" 그래야 한다. 그런데 만약 진보를 표방한 정당들의 모습을 사회에 구현한다면 어떻게 될까. 과로하는 당직자, 생활고를 겪는 활동가, 소외당한 소수자, 불신하는 정파들로 이루어진 당의 모습이 전 사회로 확대된다면 그보다 끔찍한 일은 없을 것이다. 당부터 갱신해야 한다.

현재 당의 문제들 중 하나는 앞서 말한 무기력이다. 오랜 헌신으로 인하여 지쳐버린 활동가들의 심신이다. 조직에 따라, 한편에서는 열성과 헌신 그리고 조직력을 부러워하고 다른 편에선 다양성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장점들만 추출해낸 집단이라면 성공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미 당 안에 그러한 역량이, 가능성이 존재한다. 융화되지 못했을 뿐이다. 노력하지 않았을 뿐이다. 당 안의 힘조차 모아내지 못하면서 외부와 통합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므로 당 내에 현존하는 역량의 융합이 우선 과제이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위하여 노력해왔다.

누구보다 당원은 정치공학과 동원의 대상이 아니다. 당으로부터 소외되는 당원이 아니라 가치를 존중받고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문화가 중요하다.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공동체 문화 말이다. 그런데 아직껏 이와 같은 기획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대개 정치일정에 따른 이합집산, 내부의 갈등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운동권 출신이 아닌 좌파성향 당원들의 소외와 활동영역의 협소함 때문이다. 당의 체질과 체제와 연결되는 문제들이다. 구성원의 능동성을 끌어내고, 지역의 활동성을 제고하고, 전에 없던 의제와 가치를 내세우기 위해선 당 기풍의 쇄신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선 장기 플랜의 공표와 당의 안정성 확보가 급선무이다. 또한 정체성 확보가 중요하다. 정체성은 기풍과 역사를 통하여 형성된다(좌파정당의 역사를 편찬하는 정당이 정체성을 획득할 것이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강조하는 보수정권과 보수언론에게 성숙한 국가와 사회역할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맞대응했다면, 당내 불협화음에 대한 불평과 혼계 대신 당의 성숙한 조직체계와 언로를 전제해야 한다. 정기적인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현안과 당의 활동방향에 대하여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도움이 될 것이다.

여성과 장애인, 청소년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기풍 쇄신은 기본이다. 청년과 청소년이 흥미와 의미 있는 당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당원존중의 문화라 함은 활동공간의 확대와도 긴밀하게 연결되는데, 이에 대한 시스템은 지역과 부문의 관계설정에 대해서도 언급할 ③항에서 보충한다). 또한 정치·경제적으로는 나눌 수 있어야 하고, 사회·문화적으로는 이어야 하며, 개인적으로 비울 줄 알아야 한다. 이 가치가 당 안에서 확산되어야 한다. 녹색사회를 지향하는 정당의 당원들부터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념과 생활의 만남은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육'만이 아니라 '소통'이 강조되어야 하며, 그 장치로 당원공감연수원을 확보하여 상시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삼는다. (※ 별도의 연수원을 확보하려면 상당한 재정이 비축되어야 하므로 우선 농업위원회가 활동가십터를 확장할 때에 필요재정과 운영비를 당이 지원하면서 당원공감연수원의 일부 기능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이상의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선 현재와는 다른 지도체제, 대의제, 골간조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공동대표제, 최고의원제(명칭은 변경할 수 있다), 추첨대의원제의 보완과 부활, 지역조직과 부문조직의 이원골간조직화, 지역조직의 광역화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정파들의 투명한 활동과 경쟁을 위하여 정파등록제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간헐적으로 제시되었다.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일단 정파공개제를 시범 실시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지역과 부문 그리고 당 사업에 헌신한 활동가들이 당원들에게 인정받아 선출됨으로써 전국위원과 대의원으로 진출하는 경로가 기본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에서 '가화'는 '만사성'이라는 목적을 위한 전제가 아니다. '가화'없

이 만사성이 무슨 소용인가.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에서 '수신'은 '평천하'라는 목적을 위한 전제가 아니다. '수신' 없이 '평천하'한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좌파정당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문화부터 이루어야 좌파정당이다.

② 좌파정당의 대중성 기획 = '청년+녹색+문화'

노동당은 평등. 생태. 평화 공화국을 주창했다. 노동당은 대중정당. 생활정당. 운동정당을 표방했다. 문화는 이것들과 떼어놓을 수 없으며, 포괄하기까지 한다. 스스로 천명한 이념과 지향을 달성하기 위해서 좌파정당은 문화정당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

지난 선거들은 이유 있는 정치무관심의 결과, "어떻게 되면 안 된다" 대신 "어떻게 하겠다"가 선택받았다. 노동형태의 변화와 함께 노년층의 확대, 대중문화의 영향을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가. 구체적 지목대상이 있는 정책이 강조되는가. 일반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사회 환경 변화 외에 좌파진영에서 부각되지 않고 있는 부분으로 초고령사회 진입과 다문화사회의 형성 그리고 다년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슈화할 협동조합과 마을공동체 운동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적극 개입을 통하여 중간자-잠재적 지지자들에게 분배 없는 성장은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설득시킬 방법이 필요하다. 그것이 불충분부분의 점검을 통한 정책의 브랜드화이다. 동시에 간과해선 안 될 지점이 정치적 선택은 합리성에만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합리성이 작동하는 정치적 선택을 향해 계급성과 정책이라는 합리적 판단만 요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문화정당 표방과 정책 브랜드의 결합구조는 대중성을 획득하는 좌파대중정당의 필수조건이다.

특히 청년 주체의 결집에 주목한다(물론 청년은 일정한 세대로, 동일한 의제로 묶이는 집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한다). 후속세대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고민을 가진 이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가? '안녕들하십니까' 운동, 세월호참사에 대응한 '가만히 있으라' 운동, 이른바 '청와대 투쟁'의 선두에는 청년당원들이 있었다. 당의 활동영역과 제반체계의 부실로 인하여 자신들의 구상과 기획을 실현할 수 없었을 뿐이다. 더구나 때만 되면 통합재편 논쟁이 걸리는 당에, 미래가 불분명한 당에 어떻게 신뢰를 갖는가. 어떤 사안에 적극가담하고 싶을 때에 누구와 함께 기획하고 행동할 수 있었는가. 근본적으로 노동당의 과거 노선은 과연 21세기 좌파 청년들의 전망과 일치하는가. 이러한 이유들로 일찌감치 정치진로를 정한 소수를 제외한 다수는 정치의식으로, 혹은 의무감으로 당적을 갖고는 있으나 관망하거나, 당 바깥의 활동에 동참하거나, 아니면 다른 정체성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함께' 바뀌야 한다.

'녹색좌파 대중정당'을 분명히 하면서 '동원을 위한 육성'의 대상이 아니라 당 중심세력의 세대교체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청년을 위한 정책브랜드를 가져야 하며, 개인 차원에서는 유급활동가들을 양성하고, 조직 차원에서는 당 안팎의 조직들의 허브로서 작용하는 개방형 청년사업을 추진한다. 당의 조직에 청년 주체들을 전면배치하고, 특히 이 시대

청년의 관심사와 문제의식을 당의 이념에 녹여낸다.

당은 사회문화운동의 허브로 기능해야 한다. 당원으로 조직하거나 당의 지도 아래 운영하는 조직을 세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노동 부문 역시 '오늘의 노동'에 주목한다. 예술인소셜유니온, 뮤지션유니온, 알바노조를 비롯하여 출판, 방송 등에 당사자 조직들이 나타나고 있다. 당은 확산일로에 있는 새로운 불안정 노동에 주목하는 차원을 넘어 여러 운동 혹은 조직과 결합해야 한다. 당의 노동위원회도 기성 노동조합의 간부들만이 아니라 '오늘의 노동'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인물들을 주체로 세워가야 마땅하다.

녹색정당, 평화정당, 반재벌정당을 함께 표방할 수 없는 정당은 철학이 빈곤한 정당이며, 21세기의 좌파정당일 수 없다. 더구나 에너지, 먹거리, 주거환경의 문제는 다수 인민의 주요 관심사를 넘어 삶의 방식이 되었다. 핵발전 문제의 근본 역시 돈을 연료 삼아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유지하는 체제와 떼어놓고 말할 수 없다. 핵발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의 가슴에 '언젠가 도달할' 총탄을 쏘는 것이다. 아이를 품에 안고 함부로 꽃을 꺾어선 안 된다. 여신이 변한 줄도 모르고 '귀중한 짐(아기)'을 안은 채 꽃을 꺾었다가 나무로 굳어버리는 저주를 받은 드뤼오페를 기억해야 한다. 탈핵운동과 지역분산형 에너지체제 형성운동의 선두에 서야 하는 녹색위원회 강화를 위한 지원과 녹색정책, 활동 전문인력 확보는 필수조건이다.

영화, 음악, 문학, 출판, 연극, 미술..., 여러 예술장르들의 현황과 문제는 얼핏 상이해보여도 고용불안과 불명확한 노동관계 그리고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의 일상화라는 현실을 공유한다. 비정규 노동과 자본 중심의 간접고용, 특수고용 문제 그리고 청년과 여성노동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대부분의 예술인은 사회적 약자이며 경제적 소외계층일 뿐만 아니라 비정규, 여성, 청년 노동 현실의 극단을 보여준다. 산업은 커지고 있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는 시장독점의 결과와 생산구조의 왜곡 그리고 생존권 문제라는 지점에서 만난다. 대기업 문화자본이 문화산업과 예술계 역시 점령하고 있다. 시장논리와 노동소외는 장르와 지역의 경계를 지켜주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한 접근 역시 좌파정치의 필수과제이다. 당은 좌파성향 예술인과 같은 편이어야 하고, 깨어있는 문화향유자들을 끌어당겨야 한다. 문화예술정책은 예술인을 위한 정책인 동시에 예술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문화정책은 해당 분야 종사자와 종사 예정자뿐만 아니라 관심 계층을 포섭한다. 구체성(시급성·타당성·지목대상의 분명성)이 강할수록 설득력을 얻고, 그래야 포섭할 수 있으며, 파급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비정규 노동자의 권익과 제도 바깥의 노동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선례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갈수록 활발해지는 문화의 움직임과 소통하는 단위가 드물었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문화예술정책의 중요성과 관심도는 날로 커지고 있는데도 대응은 미진했고, 광범위한 예비지지자들을 포섭하지도 못했다. 심지어 문예운동뿐만 아니라 진보정당에서도

차 선전의 도구와 동원의 대상으로 호출되곤 했다. 그간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예술인의 절박하고 시급한 노동·생존권은 원래 그런 것이려니 하고 넘겨버리곤 했다. 전문성과 활동의지를 지닌 당원들은 당에 제대로 결합하지 못했고, 기존 정당들은 광범위한 예비지지자들을 끌어당기지 못했다.

주체화한 당사자와 예비지지자들의 결집 그리고 정책적 체계화는 좌파정당의 역량과 직결된다. 예술인의 생존권과 노동자성을 제기함으로써 당사자를 주체로 세움으로써 재능과 욕구를 지닌 관심당원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외부와의 문화적 연대 또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에야 가능해지는 공감도 높은 현장형 정책의 생산은 여타 정당들과 좌파정당을 차별화할 수 있다. 문화예술인의 권리실현을 위한 예술인 노동권과 생존권 그리고 인민 전체의 향유권 신장의 길을 제시하며, 좌파예술과 지역문화 그리고 문화예술의 상호 보완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정책으로 현실화하고, 구체화하는 활동을 지원하며, 적극 가담해야 한다. 예술노동의 현실 인식, 문화의 중요성과 예술의 영향력 주시, 배제되고 미조직된 주체의 가능성이야말로 놓쳐선 안 될 노선이다. 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인 소셜유니온 주도적 참여, 그리고 레드어워드의 개최는 이 연장선 위에 있다.

노동에 녹색을 더하는 데에 그쳐선 안 되며, 녹색과 예술이 결합해야 문화정당의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 축약과 제외는 고립의 길이다. 만약 이것이 백화점식 나열로 보인다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그렇게 하기 싫은 것이다. 재차 강조하건대 21세기 녹색 좌파 대중정당 노선의 핵심은 주체의 발굴과 정치의 재구성이다.

③ 조직 재건과 보강 기획

◎ 부문과 지역의 연결. 조화. 균형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좌파정당의 중요한 토대는 셋이다. 첫째는 당원의 능동성, 둘째는 지역의 활동성, 셋째는 부문의 확장성이다. 이를 위한 당 조직의 역할은 연결이다. 중앙과 지역, 지역과 부문을 연결하여 각각의 목표와 지침을 제시하고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이 당의 의무이다. 외부활동에 연대하는 차원이 아니라 당과 사회운동을 연결할 수 있는 인적 체계 구축이 당의 사명이다. 여러 방면의 운동조직에게 인적지원, 특히 지역거점공간과 민중의 집 등을 소규모 노동조합 등의 사무 및 회합 공간으로 제공하는 공간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토대는 당의 지역과 부문의 연결로부터 시작된다.

지역조직은 당의 골간이다. 그런데 당원들의 활동권과 거주지역이 다른 경우가 많으며, 아무리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관심사와 세대로 분리되어 있다. 지역조직은 이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당수 조직이 친목모임 혹은 선전전 참여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여러 지역들이 당비 외에 자체적인 추가회비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상근자 1인의 활동비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지역정치에 투신한 활동가들 중 일부가 더 이상 버틸 기력이 없다며 통합재편을 주장하기에 이르기도 한다. 그래서 분산보다 집중을 택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그것이 중앙과 지역 혹은 가능성 있는 지역과

약세인 지역으로 구분된다면 문제가 있다. 한편 부문조직은 지역조직과 달리 자동편제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자발편제되기 때문에 적극성을 담보한다. 물론 각 부문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조직역량의 편차가 크고, 예산의 배정과 대의기구의 비중 역시 후순위로 밀려있다(노동당의 무지개기금제는 자구책이었다). 정리하면 지역과 부문의 내적 불균형이 심하다. 지역과 부문의 연결. 조화. 균형이 필요한 이유들이다.

전반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중앙정치 강화가 중요하지만, 지역의 기반을 위해서도 여력을 동원해야 한다. 우선 당비의 사용비율을 조정하여 지역교부금을 확대하여 지역조직의 인적. 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이럴 경우에 축소되는 중앙의 운영비는 당의 기초와 미래를 분명히 함으로써 재정의 추가 확보를 이끌어내겠다는 책임정치의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의 약화와 지역-부문의 불균형의 긍정적 해소를 위하여 광역당부는 기초당원협의회들의 광역화와 광역단위 부문위원회의 조직을 추진함으로써 당부의 조직력과 당원들의 소속감을 증대시킨다. 이는 지역에 결합할 수 있는 영역을 찾지 못했던 당원들을 활동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수단이자 새로운 지역활동가들을 만들어내는 방편이다. (※ 광역단위 부문위원회는 각 광역당부의 인적 현황과 목표에 따라 어느 광역당부는 녹색위원회를, 어느 도당은 농업위원회를, 어느 광역시당은 문화예술위원회 등을 우선 조직하는 식의 특화작업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자연스레 대의기구에서 과소한 부문의 발언권도 제고되어야 한다. 전국위원회 등에서 대다수 부문의 의제 통로가 없는 상황, 당규와 부문위원회 정비를 통하여 부문위원회들이 요건과 체계를 갖추게 된 상황 등을 고려할 때에 진보신당 초기에 만들어진 대의기구 내 부문할당 제한 규정은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지역 발언권의 상대적 축소가 아니다. 각 부문은 전국조직으로서 지역활동가를 발굴하고, 기존 지역활동가가 자신의 활동지향을 중심으로 대의기구화 하는 것을 보장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부문의제와 정책의 연결체계를 갖추어야 하는데, 선거에 앞서 미팅을 갖고 제안을 받아 일부 수용하는 방식은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중앙당 상근자 명단에 부문사업 전임자의 이름은 반드시 기입되어야 한다. 부문전략실 설치를 목표로 하되, 가능하기 전까지 조직실 내에 부문사업국장을 임용하여 부문사업의 총무지원과 부문위원회합동운영위원회 사무장 역할을 맡도록 한다.

노동당 당원 중심으로 지역거점공간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있다. 당의 장기전략에서도 지역거점은 중요하게 거론된다. 활동가와 당원의 관심도 사실상 지역거점으로 쏠리는 상황이다(다른 대안을 못 찾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정기적인 자체 프로그램 기획과 인력 그리고 재정의 부실은 공통의 문제이다. 부문과 지역의 조화로운 역할분담은 지역거점의 강화로 연결될 것이다. 상기한 장치들을 통하여 이를 수 있는 균형을 바탕으로 지역거점을 매개로 향후 부문은 지역을 지원하고, 지역의 거점공간 역시 네트워크로서 공간지원 역할을 지향한다.

또한 지역거점 네트워킹을 추진한다. 기존의 의례적인 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협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테이블이 되어야 한다. 개별 활동과 기반 다지기에 집중해야 하는 현실이 있으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한 만남의 정례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례적인 만남은 형식적인 회의를 하나 더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기획과 시너지를 유발하는 시스템으로 기능할 수 있다. 새로운 방식의 지역거점공간 협의체가 필요한 이유다. 이 협의체에 광역단위 부문활동가들이 결합한다면 보다 풍성한 기획과 지속성이 보장되고, 지역거점의 정치탈색화도 제어할 수 있다.

당원들의 소속감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현존하는 당원협의회들의 통폐합이 아니라, 사고당협 및 약화된 당협들을 광역화로 추스르는 과정인 기초당원협의회들의 재건은 단기 과제이고, 앞서 언급한 지역-부문 이원골간조직화는 당의 장기 역량을 만들기 위한 장기 연구 과제이며, 이 과정에서 현실을 인정하되 긍정성을 찾기 위한 기초당원협의회들의 광역화와 광역단위 부문위원회 조직의 병행추진, 그리고 지역과 부문의 상호 보완과 협력 시스템은 중기과제가 될 것이다. 상술한 제안들은 '지역vs부문'을 극복하고, '지역+부문'을 실현하여, '지역x부문'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획이다.

◎ 인력과 재정의 수급

무엇보다 인적 역량의 보존이 중요하다. 재정과 노선의 문제로 인한 인력의 유실은 당에게 가장 큰 손실이었다. 공을 들여 마련하고도 장기적으로 추진할 책임자들을 찾지 못하여 문서보관함 어딘가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장기성장전략'과 같은 기획의 처지이다. 또한 당직자들에게는 '전념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더구나 대부분 어떤 영역에선 의결기구로, 어떤 영역에선 집행기구로 임하게 되는 현실 때문에 각 단위의 전문성까지 저하되었다.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조, 맡은 직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렇기에 전략가, 당료, 정치인을 양성하고 생활을 지원하며, 당의 장기기획을 밀고나갈, 예를 들면 정책전략연구소와 같은, 기구는 필수이다. 상시적인 의제 토론과 정책 생산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을 맡아야 한다. 그리고 정책안의 도출 수준을 넘어 실제 사업과 운동으로 이어나갈 정책사업가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의 복원을 병행한다. 우리에게 계산기를 두들기려는 사람이나 깃발만 휘날리는 사람이 아니라 계산기의 능력을 가진 사람과 깃발을 만들어낼 사람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상의 현실화를 위한 필수요건이 재정의 수급이다. 국고보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이다. 하나는 앞에서 말한 당원공감연수원 실현방안처럼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동기부여이다. 일률적인 당비인상 요청보다는 당 기관지 《미래에서 온 편지》의 (성공)사례처럼 당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사업의 추진이 현실적이다. 다수 당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책기구를 위한 재원 중 일부도 이러한 방식으로 충당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기본적인 재정은 필요한 바, 인재발굴과 재정책보의 특임을 수행하는 기구의 신설이 또 다른 해법이다. 조직사업에 유능한 활동가들에게 전념성을 보장하고, 당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재원의 공세적 확보 그리고 활동가 발굴을 통한 인력 충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활동가 발굴과 지역의 인력 공급은 결과적으로 청년활동가 성장과 중앙기획-지역전략의 결합을 유도할 수 있다. 일정 기간 상시 가동하여 성과와 가능성을 보이면, 면밀한 보완과 적절한 위계상의 가닥을 잡아 상설조직화 한다.

④ 정책+활동과 홍보 강화

정책사업의 방향은 첫째, 인민의 삶과 직결된 '삶의 의제'여야 한다. 현실적인 역량과 노출 빈도라는 사정이 있지만, 당장의 선전효과보다 삼투압형 정책지향이 적절하다. 무상교통이 제기되고 있는데, 체감도 높은 무상통신(통신망 공공화, 기업 재투자를 통한 공공망 구축과 통신요금 무료화)을 제기할 시점에 이르렀다. 절실한 문제 상황을 타개할 해결책을 내놓을 경우에 큰 환호를 받게 될 주택정책은 중요하며, 급진적인 동물보호와 아동복지 정책화도 필요하다. 물론 중심에는 '녹색좌파'의 기치가 휘날릴 것이다.

둘째, 분명한 대상 그리고 정책과 운동의 결합이다. 불안정노동을 위한 정책,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조심스럽고 현실적인 정책을 내세워야 한다. 이는 상기한 주택문제와 함께 불안정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청년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또한 노동자경영참여제도와 정리해고방지를 위한 정책의 홍보를 넘어 구체적인 실천에 돌입한다. 이것 역시 대기업을 비롯하여 전방위로 확산 중인 명예퇴직의 찬바람 앞에 흔들리는 40대 이상 사무직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끌어당기는 밧줄이다. 미래세대를 위한, 아니 이미 주체인 청소년의 의제로써 선거권(연령)확대, 교육감선거 청소년투표권 보장, 학교운영 학생참여 보장도 강조한다. 삶의 의제이자 대상이 분명한 정책들 중에서 '운동'과 결합할 수 있는 의제를 도출할 수 있다. 최저임금과 주택 그리고 기본소득 등은 운동화가 가능한 정책기획의 예이다.

정당으로서 정치제도개혁의 제기는 지극히 당연하다. 정당명부비례대표제 전면 실시와 소선거구제 개혁 그리고 결선투표제 도입, 또한 선거, 피선거권 연령 하향화는 당연한 당론이겠으나, 이와 함께 내각제 등에 대한 입장도 정리해놓아야 한다. 모두 각 정당들의 이해타산이 첨예하게 얽혀있기에 진전이 더디지만, 바로 그렇기에 급진전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러한 것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나열에 그치거나 하나의 이미지로 축소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메시지 있는 이미지 정치'의 강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치가 홍보전략실의 강화이다. 과거 좌파의 선입견들 중 하나가 이미지 정치는 꿈수라는 것이었다. TV중독자와 다름없었던 오세훈이나 원전 수주 막판에 달랑 서류가방 하나 들고 비행기에 올라타는 장면을 연출하여 손가락이나 엮은 이명박의 경우는 이미지 정치가 아니라 사기다. 단편

적인 이미지에 기대는 건 허망하지만 좌파정당도 색깔과 매력을 갖추어야 한다. 태도는 어느 정도 신뢰받았고 능력은 조금씩 검증받고 있는데, 아직 매력은 장담할 수 없다. 이 매력을 부각시키는 작업이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 캐릭터, 즉 이미지다.

좌파라면서 옷치장에 왜 그리 신경 쓰느냐. 했다간 끈대 취급당하는 세상이다. 클린턴에게 색소폰이 있었고, 오바마에게 소매를 걷어 올린 셔츠가 있었으며, 히딩크에겐 "Dream Come True"란 한 마디가 있었다. 사례들이 썩 내키진 않지만, 이런 장면들은 그냥 장면이 아니라 그들의 성향을 압축해낸 메시지가 되었다. 경직성과 엄숙함, 과격의 이미지 순화에는 일부 기여한 희화화를 넘어, 현장성. 서민성. 활동성 같은 이미지가 절실하다. 의미 있는 제스처를 보여주는 '메시지 있는 이미지 정치'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 전문경험이 있는 (그리고 당에 분명히 존재하는) 인재들로 구성된 홍보전략실이다.

⑤ 정당체제의 재구성 기획

◎ 선거의 원칙

작금의 현실에서 향후 선거의 목표는 ① 타 정당과의 차별화를 통한 좌파정치의 '기지' 구축과 ② 장기성장의 토대를 위한 생존기반의 확보에 있다. 특히 제3당 혹은 제3세력 지향에서 과감히 궤도를 수정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관성적 목표가 선거 때마다 정치공학에 의한 이합집산 논의에 당을 매몰시켜왔기 때문이다. 향후 다자구도를 상정하고 (제4당을 현실적 목표로) 선거에 대응함으로써 목표와 전략을 현실화하는 것을 제안한다.

선거의 방침 역시 장기성장전략과 연계성을 지녀야 하며, 원칙적인 연대와 전술적 연합 그리고 공세적 차별화를 동시에 구사해야 한다. 자유주의정당과는 선을 명확히 긋는다. 당면 정세에 수동적으로 이끌릴 수밖에 없는 야권연합선거는 소수 직업정치인의 실익으로만 남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른바 우파 견인론은 오판이거나 정략적 구호에 불과할 뿐이다. 범좌파진영의 연합선거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지만,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물론 당면한 선거환경은 좌파정당에게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다. 보수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가 될 것이나 지지율은 공고하리라 예상할 수 있고, 안철수 현상 따위의 대안 정치 갈망에 편승한 범진보진영의 분할이 가능하다. 한편으로 통합진보당 문제가 남아있어 몇몇 정당들은 적극적 차별화, 진보/중도연합이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하지만 좌파정치의 기지인 당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좌파연대(녹색좌파 정치연합)로 장기전망을 구축하지 않으면, 그 의지의 토대를 쌓아가지 않으면 변형된 이합집산을 또다시 반복하게 된다. 당장 외부조직의 요구에 따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되며, 경쟁정당들을 중도정당 등으로 규정하고 공세할 필요가 있다.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이 전술을 위해선 차별화와 선거공조를 동시에 수행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것이 역할분담이다. 연대와 차별화의 투 트랙 프로그래밍을 위하여 우선 노동당 중심의 좌파정당재편을 위한 정통성과 기지론을 강조하면서 전략 지역과 의제를 선정하여 집중한다.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후보별(광역단위 vs 기초 단위)의 역할분담이 중요한데 광역단위는 공세적 차별화를 펼치며 독자성을 강조하고, 기초단위에서는 유연하게 대응하는 제스처를 취한다. 당은 노동의 색깔에 다섯 기치, 즉 '청년, 문화, 녹색, 새로운 노동, 기본소득' 중 최소 두 가지 이상을 대표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여 집중한다. 그에 따라 선거연대의 대상이 설정될 것이다(예를 들어 녹색과 기본소득을 대표하는 후보가 만들어진다면 녹색당과 적극 협력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분담을 사전에 공식화함으로써 당내 혼란을 방지하고 당 외부 대상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와 병행하여 유의미한 움직임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좌파연대'를 추진한다. 거점공간과 좌파단체가 있는 경우 지역좌파연대를 구성하여 향후 당의 장기성장과 녹색좌파 정치연합의 동력으로 키워낸다.

또 다른 하나는, 대선과 총선에 겨냥한, 예비내각 형태를 통한 '집단인물전술'이다. 향후 이 전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모두에게 칭찬받는-그러나 나중에 선택해주겠노라는 정책만이 아니라 인물을 통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지금까지 진보좌파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아쉬움 혹은 자신들의 알리바이, 그러니까 "뜻과 정책은 좋는데..."라는 말의 실제 뜻은 인물과 세력에 판단이었다. 이에 대한 대응전술은 '1:1'로 힘든 상황을 인정하고 '1:다수'의 선거기획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정치주체화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의제의 대변자를 선거 시에 영입하는 차원이 아니라, 당원으로서 장기간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미리 보장해야 한다. 유권자의 투표행태는 계급 외에도 '지역' '가치' '세대정서'에 영향을 받기 마련인데, 후보별, 타깃별 맞춤형 전술로 각 의제를 전면화하는 데에도 용이하다.

이상이 후보, 부문, 지역의 이중삼중 역할분담이다. 좌파정치는 당면 일정과 실익에 쫓기며 세력 재편을 논하는 양상에서 벗어나 실력으로 검증받고 경쟁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진짜 현실이다.

※ 2016년 총선 대응을 2015년 상반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소모적인 논의에 매몰될 시간이 없다. 2016년 총선은 비례후보와 특정 지역후보들에 집중하는 전술을 구사하게 될 것이다. 이 집중전술이 기본골간조직의 보강과 충돌하지 않는 방안이 상책, 그것과 충돌하는 방식이 되거나 역으로 장기대비에 몰두하는 것은 중책,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은 하책이다. 그 첫 단추로 후보군을 조기에 가시화한다. 의제별, 전략지역별 후보들을 부각시키고, 정기적인 정책간담회를 시작한다. 이 과정을 거쳐 비례후보들 또한 당원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어야 한다.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 정책브랜드에 의한 협력과 재구성 "기본소득은 고리이다"

좌파정당의 재구성과 관련하여 정책의제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아니 그래야 한다. 기본소득은 긍정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설득과 공감의 영역을 다년간 확장해온 기본소득에 대한 전향적인 공적 합의를 피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 사회전환을 위하여, 그리고 전

략적으로 보수정치의 기반을 허물고 좌파진영의 토대를 넓히기 위하여 금융소득과 지대소득 과세를 통한 기본소득을 주창할 시점이다. 혹자는 기본소득에는 좌파의 지향과 상충하는 면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기본소득은 그 자체로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며, 점차 다수가 되어가는 프레카리아트의 규합과 '투쟁여건'의 조성을 위한 '고리'로 이해해야 한다.

특히 정치적으로 '고리'의 가능성을 지닌다. 한국 좌파정당의 재구성을 위한 1단계(좌파정당 내외 조직, 세력의 협력)의 '고리'이며, 2단계(당대당, 당과 노동조직의 협력과 모색)를 위한 '고리', 나아가 3단계(국제 좌파정당 연계)의 '고리'라는 가능성을 갖는다. 민주당과 안철수의 합방으로 만들어진 새정치민주연합의 혼란상황, 통합진보당 무력화, 정의당의 불안한 미래, 민주노총의 현황, 미력하나 역사와 의지가 있는 노동당, 그리고 색깔이 있는 녹색당, 보수양당 체제의 재확인과 군소정당들의 정리가 이루어지고, 아시아 국제정치 또한 좌파정당의 협력을 준비해야 하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좌파정치의 재구성은 어떤 고리를 찾아내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이겠는가.

※ 기본소득에 대한 첨언

하나, 각 개인들에게 기본소득 지지는 병행전술일 수 있다. 사적으로는 여러 활동을 통하여 예술과 노동의 의제를 중시하면서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와 법, 제도의 장치 마련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도외시키고 기본소득에 의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면, 그것은 있지도 않은 대상에 대한 독백일 뿐이다. 세상에 완벽하고 유일한 해결책은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다. 모든 대안적 해법들의 기능은 역할분담과 상호보완이다. 문화적으로 문화민주사회를 위하여 생산자와 향유자 모두의 '조건' 가능성으로 제시할 수 있다.

둘, 공론으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지점들을 압축하면 개량성과 현실성에 대한 우려이다(특정 정파의 의제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진부하고 학술적으로 나태한 태도이다). 전자는 동의하기 힘든 시각(체제 유지와 변혁 프레임)이고, 후자는 보다 치밀해져야 할 문제(재원)이다. 여러 생각들을 나누며 사회전환의 주요의제로 채택하기 위한 토론에 돌입해야 한다.

오늘의 약속

과연 오늘을 오늘이라 부를 수 있을까.

이른바 민주정부 10년 이후 보수정권이 연이어 집권하고, 대안이 되어야 할 진보좌파정당들은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통합진보당으로 나뉘어 분립시대를 맞고 있다. 십여 년 전 민주노동당의 일정한 성과를 뒤로 하고 민주노동당 분당, 통합진보당 분열, 이석기 사건까지 거치며 진보좌파정치의 미래에 근본적인 의문을 표하는 유권자들까지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혹자는 좌파에게 '정치'를 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간 좁은 의미의 정치 과잉이 남긴 장면이 오늘의 모습이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 곳에서 끊이지 않는 죽음과 공권력의 만행은 한국사회의 맨얼굴과 보수정권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풍경들이다. 더 이상 죄책감

을 전수할 수 없다. 흠탕물 이는 물길을 바꾸어야 한다.

2015년 1월 기준으로, 7년 남짓 동안 다섯 차례의 전국선거가 있다. 우리는 2016년 총선에서 원내 진입을 이루고, 2017년 대선을 신-좌파연대(녹색좌파 정치연합) 후보로 돌파한 후,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을 배출하고, 2020년 총선에서 제4당의 지위를 획득해야 한다. 이어 2022년 대선에서 한국의 정치지형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상수여야 한다. 각 선거별로 목표와 기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달성해야 한다. '녹색좌파 대중정당'을 위한 혁신, '녹색좌파 정치연합' 추진에 의한 확장 그리고 '민주노조운동의 쇄신'이라는 조건의 가세는 그 자체가 목적인 동시에 그 모두가 하나의 장기기획으로 모아지는 디딤돌들이다.

새로운 좌파정치 시대를 열기 위한 이 기획은 정치조건과 지위의 획득만이 아니라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고, 좌파정치 주체들의 공동체문화가 사회모델이 되고, 그래서 서서히 결실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시작함으로써 인민 역시 삶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다시 품게 하려는 것이다. 그 이후를 축적된 힘으로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반동의 동반자들만이 할 수 있다. 었나가버린 사회가 우리를 걸림돌로 취급한다면, 그와 같은 걸림돌은 더 많아져야 하고, 그 걸림돌이 실은 디딤돌이라는 사실을 밝혀낸다면, 디딤돌들이 모여 견고한 다리를 만드는 날은 오고야 만다. 그 다리로 이어질,

“녹색좌파 대중정당의 곧은길과 녹색좌파 정치연합의 신작로에 동행하자!”

우리의 정치는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항쟁이고, 사회구성원들을 향한 호소이며, 우리가 정치주체라는 선언이다. 그것이 우리의 소임이자 미래를 약속하는 길이다. 정치의 재구성을, 사회의 재구성을 더는 늦출 수 없다. 먼 미래가 아니라 당장 오늘을 위하여 결단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사회에게, 그리고 우리자신에게 해야 할 '오늘의 약속'이다.